

1. 총평

2019년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는 개념, 이론, 법령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나 ‘중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도 네 문제가 있다(5, 10, 18, 23번).

이 문제들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이론 문제이거나(10번 Miller의 모호성 모형, 18번 리바이어던 가설), 법령의 세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5번 소청심사위원회, 23번 법률의 목적).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알파행정학 기본서에 대부분 있고 다른 지문과 비교할 경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지문 중에서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 정보기술 아키텍처, Leviathan 가설, Romer & Rosenthal의 회복수준이론, 승진소요 최저연수, 부패에 대한 구조적 접근 등의 내용도 알파행정학 기본서에 모두 들어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령의 세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암기한 수험생은 고득점 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2019년 국회직 8급 문제의 수준은 2018년 국회직 8급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일반적인 국회직 8급 문제의 수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8점 이상이라면 우수, 84점에서 80점까지는 보통, 76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3	개념문제	4
정책학	3	이론문제	11
조직이론	5	법령문제	8
인사행정론	5	학자문제	2
재무행정론	4	사례문제	-
지방자치론	3		
행정환류론	2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기초이론과 정책학이 조금 적게 출제되고, 조직이론과 인사행정론이 조금 많이 출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면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개념, 이론, 법령, 학자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으나, 법령문제가 25문제 중 8문제로 다소 많이 출제되었다. 다른 시험과 달리 국회시험에서는 법령 문제의 출제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2018년의 경우도 8문제). 그러나 이 또한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
중상	5, 10, 18, 23
중	1, 3, 4, 6, 7, 9, 12, 13, 14, 15, 16, 17, 19, 21, 24, 25.
중하	2, 8, 11, 20, 22.

4. 당부 사항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해설] ④(옳음) 도로교통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에 해당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14개[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79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 ①(틀림) 정부기업은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한다.
- ②(틀림) 국가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지방기업은 「지방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③(틀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시장성이 큼)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공공성이 큼)한다.
- ⑤(틀림) 공기업의 기관장은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에 있어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25-432.

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019 국회직 8급

< 보 기 >

- ㄱ.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을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 ㄴ. 정부 내의 관리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규칙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 ㄷ.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 ㄹ.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
- ㅁ.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해설] ㄱ.(옳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신공공관리는 최협의를 신공공관리(신관리주의)에 시장주의(신제도주의적 경제학)를 추가한 뜻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기법 그리고 시장 원리를 정부에 도입·접목하려는 노력이다.

ㄴ.(틀림)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 기법을 정부관료제에 도입해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ㄷ.(옳음)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managerialism)와 신제도주의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을 바탕으로 한다. 즉, 신제도주의의 경제학의 범주에 속하는 공공선택론,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ㄹ.(틀림) 신공공관리론은 개선된 보고, 감독 및 책임성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관리통제를 하부로 위임한다. 그리고 사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

ㅁ.(옳음)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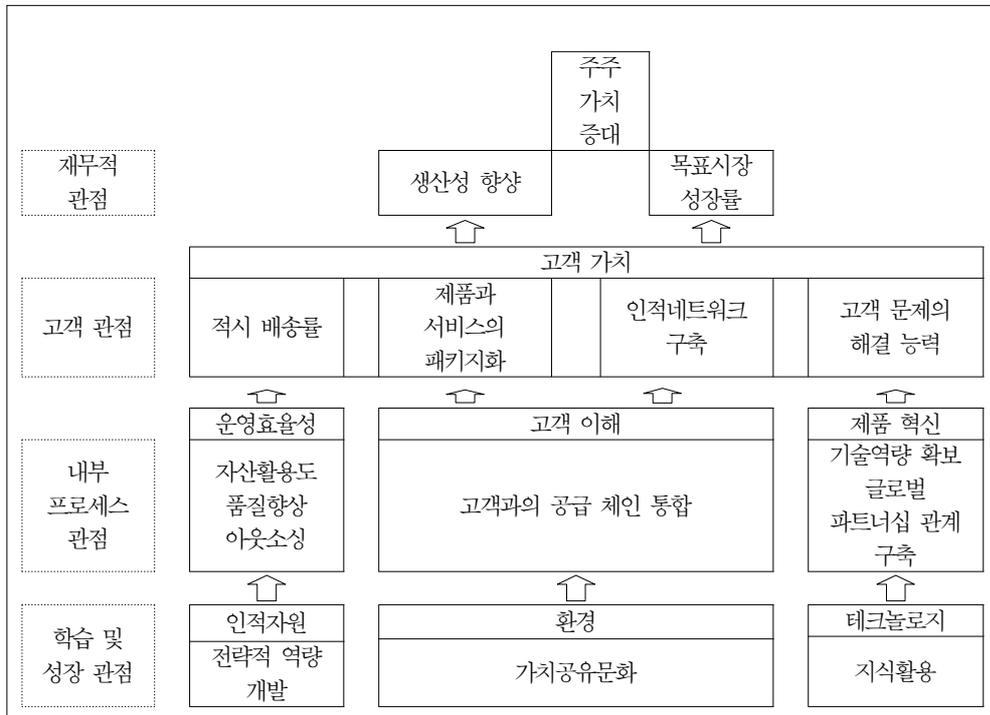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69-173.

9.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 ①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로는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 ②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 ③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 ④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 ⑤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행동지향적 관점에 해당한다.

[해설] ⑤(틀림) 고객 관점은 BSC의 4가지 관점 중에서 외부지향적 관점에 해당하며,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된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기업의 관점에서 BSC 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 ①(옳음) 재무지표는 전통적인 후행지표이다. 재무지표의 예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 ②(옳음) 정부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관점을 중요한 위치에 놓는다. 즉, 고객 관점은 공공부문에서 BSC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대표적이다.
- ③(옳음) 학습과 성장 관점은 장기적 관점의 지표로서, 조직이 보유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다.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 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 ④(옳음) 업무처리 관점은 정부부문에서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과정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 공개 등이 있다.

[정답] ⑤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83-384.

10.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직 8급

(ㄱ)은 밀러(Gerald J. Miller)가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을 예산에 적용하여 1991년에 개발한 예산이론(모형)이다. (ㄱ)은 독립적인 조직들이나 조직의 하위단위들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조직의 예산결정에 적합한 예산이론(모형)이다.

- ① 모호성 모형
- ② 단절적 균형 이론
- ③ 다중합리성 모형
- ④ 쓰레기통 모형

⑤ 무의사결정론

[해설] ①(옳음) 박스의 내용은 밀러(Miller)가 제시한 모호성(ambiguity model)에 대한 설명이다.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밀러는 의향의 모호성, 이해의 모호성, 역사의 모호성, 조직의 모호성 등을 전제로, 예산결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결정에 참여해야 할 참여자, 결정의 기회 등 결정의 요소가 우연히 서로 잘 조화되어 합치될 때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p><모호성의 종류></p> <p>(1) 의향의 모호성 : 일관된 목표나 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p> <p>(2) 이해의 모호성 : 조직이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원인-결과에 대한 지식이 없다.</p> <p>(3) 역사의 모호성 :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양각색이며, 지나치게 불명확하다.</p> <p>(4) 조직의 모호성 : 결정자의 참여와 관심에 관한 것으로 참여자가 수시로 교체된다.</p>
--

모호성 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대학조직), 은유와 해석의 강조, 제도와 절차의 영향(강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조직에 대해 적용이 곤란하고, 사후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논란) 쓰레기통 모형 : 모호성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무결정모형(non-decision model)이라고도 한다(신무섭, 재무행정학). 신무섭 교수의 설명에 따를 경우, 정답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밀러(Miller)의 모형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답은 모호성 모형이 된다.

②(틀림) 단절적 균형 이론예산 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한 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이론이다.

③(틀림) 다중합리성 모형은 Thumaier & Willoughby(2001)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서,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 예산결정모형을 통합한 모형이다.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분석가들은 각 부처의 업무와 자원 활용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거시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 관료들의 미시적 관점과 정부직 관료의 거시적 관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⑤(틀림) 무의사결정론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의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73-674.

11.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 ①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 ②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 ③ 광역 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 ④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⑤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설] ①(틀림)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등이 있다. 일부사무조합은 공동처리방식에 해당하고, 도시공동체는 연합방식에 해당한다.

②(옳음)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재정적 격차로 인하여 주민의 부담과 편익의 향유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 간 균질화와 주민복지의 국민적 평균화를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③(옳음)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과다인원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행정의 외부효과로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

④(옳음)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옳음)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집행하거나, 그 사무에 대한 연락·조정을 도모하고, 광역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80-783.

14.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직 8급

(ㄱ)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ㄴ)의 예외에 해당한다.

(ㄱ) (ㄴ)

- ① 수입금마련경비 통일성의 원칙
- ② 수입대체경비 통일성의 원칙
- ③ 수입금마련지출 한정성의 원칙
- ④ 수입대체경비 한정성의 원칙
- ⑤ 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해설] ②(옳음) 박스 내용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통일성과 완전성 원칙에 위배된다.

구 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개 념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정부기업(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등) 이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 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	① 등기부 등초본 발행 경비 ② 외교부의 여권 발급 경비 ③ 교육부 대학입시경비 ④ 각 시험연구기관의 위탁시험연구비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 ②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부가보험료수입
성 격	행정 활동의 영역 지출 자체가 목적이고 수입이 수반된다.	기업 활동의 영역 수입금 마련이 목적이고 지출이 수반된다.
직접지출범위	예산에 반영된 것과 초과수입 모두 직접지출 인정	예산 초과수입만 직접지출 인정
예산의 원칙	① 직접지출 인정 - 통일성 위배 ② 예산에 반영된 것 - 완전성 위배 안 됨. ③ 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 - 완전성 위배	① 직접지출 인정 - 통일성 위배 ② 초과수입 초과지출한 것 - 완전성 위배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704.

15.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직 8급

- ①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 ④ 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논리적 이해와 연상 암기를 증시하는 믿을 수 있는 선생, 믿을 수 있는 교재, 믿을 수 있는 강의,
행정학 의문점 해소는 위계점 알파행정학 카페(cafe.daum.net/alphapa)에서

[해설] ④(옳음) 국세의 간접세로는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들 수 있다.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이나 지방세이다.
<국세의 종류>

국세(13)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특별시의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광역시의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71-872.

18. 다음 글의 (ㄱ)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직 8급

(ㄱ)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하여 재정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 이론
- ②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
- ③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 ④ 지대추구이론
- ⑤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

[해설] ⑤(옳음) 박스의 내용은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공공부문의 총체적 규모가 정부의 조세 및 지출 권한의 분권화와 반비례해(집권화와 비례해) 변화된다는 가설이다. 이는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 권한이 집중화될 경우, 정치인·관료·로비스트들의 선호가 재정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틀림) 로머와 로젠탈(Tomas Romer & Howard Rosenthal)의 회복수준 이론은 중위투표자 정리를 비판한 이론으로서 예산이 팽창되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이다. 관료가 예산안을 제시하면 이는 국민투표에서 다수결원칙에 따라 통과되거나 기각되는데, 예산안이 기각되면 공공지출은 회복수준(reversion level)으로 결정된다. 회복수준(reversion level)이란 관료가 제안한 예산안이 기각되었을 경우 복귀해야 하는 지출수준을 의미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복수준의 예로는 전년도 지출수준을 들 수 있다. 회복수준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아주 낮다면 투표자들은 낮은 수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팽창된다.
- ②(틀림) 파킨슨(Cyril N. Parkinson)의 법칙은 영국의 해군성에 대한 실증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연평균 5.75% 증가)는 것이다.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한다.
- ③(틀림)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관료의 예산극대화 추구 성향으로 인해 적정 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과다지출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 ④(틀림) 지대추구는 부(富)의 이전을 피하는 로비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⑤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2, 156, 56, 156, 80.

21. 우리나라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40%를 고려하여 작성된다.
- ②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③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간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④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⑤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틀림)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 우정2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 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80%,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20%로 하여 작성한다.

②(옳음)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공무원은 제외)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 제외) 기준>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이상
1년 6개월	2년	2년	3년 6개월	4년	3년	제한 없음.

③(옳음) 근속승진제는 일정 기간 복무한 공무원을 자동 승진시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간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옳음) 공개경쟁승진은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관 구분 없이 승진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⑤(옳음) 특별승진은 민원봉사대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승진 사유>

-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사람(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4급 이하 공무원)
-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명예퇴직할 때(3급 이하 공무원)
-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때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60-562.

22. 갈등의 조성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면화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정보전달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시킨다.
-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한다.
- ③ 상황에 따라 정보전달을 억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한 정보를 전달한다.
- ④ 조직의 수직적·수평적 분화를 통해 조직구조를 변경한다.
- ⑤ 단위부서들 간에 경쟁상황을 조성한다.

[해설] ②(틀림)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상위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갈등 해소전략이다. <갈등의 해소 전략과 조성 전략>

해소 전략	조장(조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및 완화(smoothing, 대립적인 의견이나 이해 관계를 모호하게 하고 공통 요인을 내세우는 잠정적 해결책) ●회피(avoidance) 및 상관의 명령 ●행태 변화[조직발전(OD)] ●협상 및 타협 ●조정 및 중재 - 제3자(정부 포함) 개입 ●계층제(공식적 권위, 원시적이면서도 최후 수단) ●구조적 요인의 개편 : 갈등의 근본적 해결, 조정담당기구의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권력의 재분배(의사전달통로의 의도적 변경) ●수평적 분화를 통한 조직구조의 변경 ●충격요법적 방법 ●인사정책적 방법 ●경쟁 상황의 창출 ●정보전달의 억제 또는 정보의 과다 제공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83-484.

23.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1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 행정가치로 옳은 것은?

- ① 합법성과 형평성
- ② 형평성과 공정성
- ③ 공정성과 민주성
- ④ 민주성과 능률성
- ⑤ 능률성과 합법성

[해설] ④(옳음) 현대 행정의 양대 이념은 민주성과 능률성이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공통적으로 법률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91, 217.

24.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ㄴ.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에 조정자 역할 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ㄷ.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ㄹ. 국가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ㄱ.(틀림)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서,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인 이슈네트워크와 구별된다.

ㄴ.(옳음)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ㄷ.(옳음)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ㄹ.(틀림) 국가조합주의 체계하에서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조합주의 하에서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비교>

구 분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이슈공동체(이슈네트워크)
정책행위자	제한적, 폐쇄적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 집단, 전문가집단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모든 참여자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한다.	참여자 중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는 한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중요시되는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주도자도 변한다.
행위자 간의 관계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유동적이고 불안정적인 관계
	상호작용의 빈도 높음.	상호작용의 빈도 낮음.
	균등한 권력 보유	불균등한 권력 보유
	상호 협력적 관계(수평적)	경쟁적 관계(수평적)
정책산출	처음 의도한 내용	결정 과정에서 정책 내용의 변동
	예측 용이	예측 곤란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유사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상이
국가의 역할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45-252.

25.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력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 ②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 ③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를 대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 ④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 ⑤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가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설] ①(틀림)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구조적 접근이다. 권력문화적 접근은 공직과 사직의 혼동, 권력의 남용, 장기집권의 병폐 등을 포함한 미분화된 권력문화가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공무원 부패의 원인 : 김영중 교수>

- (1) 맥락적 분석 : 부패를 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본다. 즉, 부패를 발전의 종속 변수로서 필요악으로 본다.
- (2) 구조적 분석 :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 복종관계나 공직사유관 등에서 도출된 공직자들의 의식구조 등이 부패의 원인이다.
- (3) 거시적 분석 : 행정통제의 미비와 결함, 비민주적인 행정체제와 제도, 공직자의 욕구기대와 현실적인 보수구조의 심각한 괴리 현상 등이 부패의 원인이다.
- (4) 정경유착적 분석 :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 중 고도경제성장의 모형과 불균형발전모형을 선택한 국가에서 엘리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아합하여 부패가 일어난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15-616.